

전문가 코칭

서강대학교 컴플라이언스센터 조 창 훈 국장

부패 리스크(Bribery Risk)

윤리 연구소

부패 기업에서 준법경영 선도 기업으로,
지멘스의 도약

시대를 관통하는 인재상, '청백리'

—
중국의 반부패 동향

기업윤리 브리프스

부패 리스크(Bribery Risk)

국내 유일의 기업윤리 월간지
2018
4



국민권익위원회

☎ 110

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acrc.go.kr ▶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행일 2018년 4월 1일 (매월발행, 통권64호, 비매품) 발행인 박은정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 신청 044-200-7166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전문가 코칭 부패 리스크(Bribery Risk)



조 창 훈 국장
서강대학교 컴플라이언스센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대우 교수

Q1. 부패 리스크(Bribery Risk)란 무엇이고, 부패 리스크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Bribery Risk를 부패 리스크라고 하지 않고, 뇌물(수수) 리스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쉽고 분명하며, 「ISO 37001(2016):2016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의 전체 내용과도 부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뇌물수수 이슈가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기업의 비즈니스 영속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끼리의 뇌물수수(收受)가 그 동안 필요했던 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예측가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계약)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공공조달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을’이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유지 과정에서 ‘갑’의 의사결정 기준이나 진행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갑’의 불투명한 정책이나 실무 진행과정에서의 차별적 대우(특혜) 등이 느껴진다고 하면 ‘비용(이익 제공)’을 써서라도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에서는 ‘갑’의 불투명한 정책과 실무 진행과정에서의 차별적 대우(특혜) 등이 뇌물수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 입장에서 공공영역에서의 사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번외적인 비용(이익 제공)까지 쓰고자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가 또는 계약 총액’에는 합법적인 수준 이외의 주고 받는 관계비용(뇌물수수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그 동안의 ‘비즈니스적 관행 비용’이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결국은 이와 같은 성격의 비윤리적 비용까지도 ‘원가 또는 국민의 세금’에 포함시켜 최종적으로는 국민 또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영역 역시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다양한 ‘갑질’과 ‘로비 활동’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현 정부 이후, 이와 같은 행태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점차 조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ISO 37001(2016)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사용지침’.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조직의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부패방지 실행방침을 제시한다.

Q2. 반부패의 법제화, 규범화 추세 속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는 ‘글로벌 윤리 라운드’를 형성하면서 비윤리적 기업들의 국제거래와 영업관행을 크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리적인 기업 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주요 국가별 시스템에 반부패 관련 법규와 적용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벌금과 평판 리스크 등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반부패 강조의 영역이었던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부정부패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감내해야 할 ‘윤리적 비용’이 국내외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이 당연히 써야 할 비용이었지만, 쓰지 않고 있었던 선택적 비용인 만큼 추가적인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업들은 전통적인 이익의 개념을 확장시켜 써야 할 ‘윤리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이 사회가 크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CSR)만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윤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다양한 기회비용을 감내하면서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경제적 법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윤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윤리는 곧 ‘추가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윤리적으로 영업활동을 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윤리적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즉, 모든 뇌물 관련 이슈를 해당 기업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과 효과적인 제도의 운용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견제 시스템이 서로 잘 작동해야만 개별기업을 넘어서 전체적인 뇌물비용(비윤리적인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윤리의 영역은 법 규범적인 이해와 실무적인 고민을 연계하여 접근하지 못 한다면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기업윤리 영역의 연구 및 관련활동은 기업 현실을 모르는 제 3자적 관점이 아니라, ‘내부자 시각’에서 법규준수(Compliance) 접근법을 통해 이론적·실무적·규범적인 종합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모범 기준)와 반부패 관련 모범 경영 사례는 우리 기업들 모두가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외부 행사용과 평가 자료 제출을 위한 기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실질’이 담겨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직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드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한국상사 00실장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과 걸맞은 방침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ISO 37001이 요구하는 리더십과 고려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PDCA 모형을 기반으로 설명되는 ISO 37001은 [PLAN, 계획단계]를 통해 각 조직에 효율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ISO 37001 Study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PLAN, 계획단계] 중 '리더십'과 '기획'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LAN 2. 리더십]

ISO 37001 리더십의 요구 사항은 ① 리더십과 의지표명 ② 부패방지 방침 ③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입니다. 즉, 부패방지와 관련된 리더의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방침을 정하고 조직에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① 리더십과 의지표명

대표적인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상층부의 리더십과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조직에 이사회와 같은 지배기구가 없다면, 최고경영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배기구에서 부패방지 방침을 승인했다면 최고경영자 역시 반부패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조직의 부패 리스크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패방지시스템을 수립하고, 조직 내 부패방지 문화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이 효과성을 보일 수 있도록 인원 및 자원을 배분하고 이행 과정을 감독함으로써 본인의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② 부패방지 방침

의지를 표명하였다면 조직은 부패방지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유지 및 검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방침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부패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보통이상인 관련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과 준수를 위해 최고경영자, 관리자 그리고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최고경영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부패방지의 권한을 조직 내에 할당해야 합니다. 모든 계층의 관리자는 요구사항이 각 부서에 적용되고 준수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배기구 및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부패 관련 이슈에 대해 구성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PLAN 3. 기획]

부패방지를 위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면(5장) 이제 부패방지를 위한 목표와 방법을 기획해야 합니다. 6장 '기획'은 목표달성 방법을 기획할 때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①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기획할 때 '조직상황'(4장)에서 언급되었던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부패 리스크 평가에서 파악된 리스크가 개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직은 식별된 리스크와 개선사항을 다룰 수 있는 조치, 이러한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을 기획해야 합니다.

② 부패방지를 위한 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부패방지 방침과의 일관성, 측정가능성(가능한 경우), 달성가능성, 감독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을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과정 중에 다음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달성대상 / 목표달성 시기 / 필요자원 / 결과 평가 및 보고 방법 / 책임자 / 제재 또는 처벌을 부과하는 인원

P
PLAN
4~6장

4장 조직상황

5장 리더십

- ① 리더십과 의지표명
- ② 부패방지 방침
- ③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6장 기획

- ①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② 부패방지를 위한 목표와 달성 기획

D DO
7~8장

C CHECK
9장

A ACT
10장

I 글로벌 민간 기업의 부패방지 방침 <예시> I

I	목적
II	본 정책은 등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III	감독 및 관리
IV	우리 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 수수와 부패를 금지합니다
V	허용 가능한 비용
VI	우리 회사는 금행료 지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VII	회사 자원은 정치적 현금이나 활동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II	자산기부 및 행사후원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IX	우리 회사는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X	청탁과 감청은 신고해야 합니다
XI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동일한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XII	우리 회사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고객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XIII	인수합병 활동은 부패방지 심사가 필요합니다
XIV	연례 교육 및 수료증
XV	신고 및 비 보복
XVI	징계조치

위와 같이 ISO 37001의 [PLAN, 계획단계] 중, '리더십'과 '기획'의 요구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ISO 37001 Study'에서는 ISO 37001의 [DO, 실행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는 부패가 일상이었던 80년대의 한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십 년이 흐른 오늘 날까지도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 의혹은 여전히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다. 씁쓸한 일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청탁금지법 같은 부패방지 정책이 시행되고 시민의식도 향상되면서 묻혀있던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부패의 오래된 고리를 끊어내는 과정이라면 마땅히 감내해야 할 일이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부패 척결에 힘쓰는 것은 특별히 도덕적이라기보다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곧 뛰어난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력보다 뇌물이 통하는 곳에 인재가 머물리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뇌물 스캔들은 개인과 기업,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이번 사례 돋보기에서는 조직적 관행과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부패가 얼마나 큰 타격으로 되돌아왔는지 짚어보았다.

관행이 불러온 부패 리스크

관행. 전통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읽히는 관행은 뇌물수수로 입건되는 피의자들의 단골 멘트다. 그 정도의 항응, 사례금은 업계 특성상 건네는 성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직무관계자들이 3만 원 이상의 항응을 대접받아도 별 문제가 없었다. 이처럼 관행 하에 저질러진 부패 스캔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백억 대의 손실을 불러온 관행, '불법 리베이트'

리베이트.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상품 대금으로 받은 액수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사례금으로 되돌려주는 행위다. 의료계의 리베이트란 제약회사가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리베이트 비용이 환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 인하 정책이 그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미 제약업계의 관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B제약 같은 대형 제약회사도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B제약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적발된 리베이트 건으로 142개의 의약품목가격을 평균 3.6%인하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전년 대비 연 약 104억 원대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판매촉진을 노린 리베이트가 오히려 막대한 영업 손실을 준 셈이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의사협회마저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B제약의 리베이트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사법처리를 당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만에 100억 원의 매출이 하락했다. 심각한 위기였다. 그렇다고 국내의 중소제약 회사가 반사이익을 본 것도 아니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약효가 검증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그만이었다. 관행이었던 불법영업 활동이 국내 의료산업 자체를 흔들었던 것이다.



공공입찰 참여금지, '뇌물 공여'

공공입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따내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사업은 대금 지급도 확실하고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에 많은 기업들이 공공입찰에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공정한 계약집행에 해가 될 염려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사업에서의 부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

구하고 비리를 저질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뇌물을 주면 민원을 해결해주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오래된 유착, 관행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A중공업도 그 중 하나다. 2013년 A중공업은 UAE 수출용 부품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K기관 관계자에게 17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 이 사건으로 A중공업은 2019년까지 공공입찰 참여가 금지됐다.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뜸한 요즘, 국가사업 수주가 원천 차단된 것은 엄청난 손실이다. 당장 군함,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A중공업의 특수선 사업부는 직격탄을 맞았다. 원래 우리 업계는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관행의 답습이 일감절벽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부패 사슬, '정경유착'

남미의 몇몇 나라에서는 매일 부패 스캔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다. 부패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듯, 경제 역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브라질 검찰은 2014년 3월부터 '세차 작전'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정경유착을 비롯한 불법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고강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오데브레히트 스캔들이라는 거대 규모의 뇌물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브라질의 대형 건설회사인 오데브레히트가 공공사업 계약을 하기 위해 남미 여러 국가의 정치인과 선거본부, 정당 고위 관계자들에 뇌물을 뿌린 것이다. 그 액수는 무려 8억 달러 상당(8516억 원)이었다. 수사팀의 칼날은 전현직 대통령들에게도 향했다. 이 과정에서 롤라 대통령의 후임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됐다.



지지율 83%를 기록했던 ‘노동자들의 대통령’ 룰라 또한 오데브레히트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밝혀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때 브라질의 영웅이었던 룰라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에 브라질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많은 브라질 국민들은 ‘세차 작전’ 수사팀의 수장인 모루 판사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열렬히 그를 응원하고 있다. 부패척결이 브라질의 성장과 도약에 필수조건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탐욕이 불러온 부패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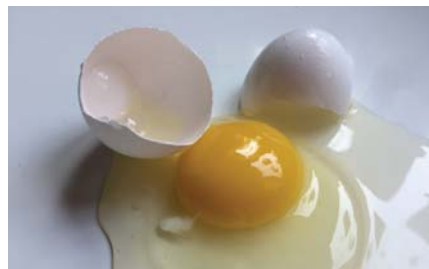
개인의 탐욕으로 벌어진 부패 사건도 적지 않다. 구매담당자가 납품업체 사장에게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공무원이 특정 기업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일은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개인의 부패 행위 또한 제품의 이미지,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H사의 납품비리, 안심계란의 배신

안심계란은 H사의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항생제 검사, 살모넬라 검사, 잔류 농약검사 등을 통과한 계란에 붙여주는 브랜드다. H사가 보증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기에 축산 농가들이 선호하는 납품처이기도 하다. 덕분에 안심계란 사업부의 납품업체 담당자는 막대한 힘을 가진다. 안심계란 브랜드를 붙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높았던 시기, 안심계란 사업 담당자의 뇌물 수수 및 불법 납품 재계약 사건이 있었다. 당시 뇌물을 수수한 직원 두 명이 구속되었고, 뇌물 공여자였던 농

장주와의 납품계약이 해지되었다. 문제는 계약이 해지된 농장주가 납품과정에서의 H사 직원들의 비리를 빌미로 재계약을 요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견디다 못한 H사 측은 재계약을 승인하였다. 불법을 저지른 납품업체와는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신뢰하는 브랜드에 비리로 얼룩진 물건이 납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안심계란을 신뢰했던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토로했다. 뒤통수치지 못한 개인의 행실로 인해 열심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직원의 부패는 곧 기업의 위기, 알리바바의 부패 스캔들

알리바바는 마윈이 설립한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직한 조직문화가 필수이기에 마윈은 2010년부터 사내에 반부패 부서를 세우는 등 부패를 방지하고자 애썼다. 하지만 개개인의 마인드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4년, 뉴욕증시 상장을 앞두고 부패 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알리바바 그룹 인력자원부 왕카이 부총재가 연루된 뇌물 사건이었다. 알리바바의 연회, 광고 촬영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수장이었던 왕전 부총재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이다. 뇌물의 액수는 무려 약 4억 2천 5백만 원에 달했다.

직원들의 부패는 주시 폭락으로 이어졌다. 2015년 5월, 뉴욕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한 알리바바의 주가는, 짝퉁과 뇌물의 기업이라는 중국 정부의 날 선 비난과 가격 부정행위에 대

한 벌금형 사태로 인해 2014년 11월 대비 33%나 하락했다.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준법경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직원부터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알리바바의 행태가 투자자들의 실망을 부른 것이다.

사회적 책임활동을 넘어 경영활동으로의 부패 리스크 관리

조직적 관행과 개인의 일탈. 원인은 달라도 부패의 끝은 동일하다. 신뢰의 균열이다. 관행이든 일탈이든 일단 뇌물 스캔들이 터지면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나 관련 당국의 검증 프로세스 전체를 의심하게 된다. 결국 개인들은 직접 비교 분석에 나서거나 아예 시장에서 이탈해 대체재를 찾게 된다. 해외 브랜드를 구입하거나 아예 소비하지 않는 식이다. 이러한 기조가 심화되면 국가 경쟁력 하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부패는 필연적으로 불신을 부른다. 뇌물, 향응 같은 탈법적 관행이 조직 전체의 위기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부패방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L사의 경우,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립해 외부인사에게 상품의 입점, 편성, 퇴점의 권한을 맡겼다. 내부 비리를 차단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다. D제약을 비롯해 K사, S사 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37001) 인증을 획득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굶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부패는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정교한 방지책이 있음에도 막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사건이 터졌을 때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미봉책으로 덮어버릴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부패의 원인을 돌아보고 벗어나고자 노력할 때,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윤리연구소

- 인사이트

부패 기업에서 준법경영 선도 기업으로, 지멘스의 도약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뇌물, 횡령, 비자금 조성 등의 많은 부패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부패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조하는 분위기가 있다.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한 한국 뿐만 아니라 오랜시간 국격을 키워온 선진국 역시 부패에 있어 청정지역은 아니었다.

경제, 문화, 기술,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글로벌 기업도 엄청난 부패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바로 1874년에 설립되어 백 오십여 년의 역사를 지닌 지멘스다. 미국에 GE가 있다면 독일에는 지멘스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멘스는 기술강국 독일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부패 스캔들

2006년 말, 지멘스는 분식회계, 공금횡령, 뇌물 제공 등 전형적인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다. 횡령된 공금은 무려 1억 유로가 넘었고 유럽 도처에 흩어져 있던 간부들의 계좌에서도 수천만 유로의 비자금이 발견됐다. 이것은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뇌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과업이었다. 이 돈은 타 국가에서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정치인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는데 쓰였다. 무려 7천억 원에 달했다.

“뇌물 수수는 지멘스 사업모델의 한 부분이었다”

지멘스의 부패 스캔들을 브리핑하는 독일 연방범죄수사국 대변인의 말은, 내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독일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터였다. 독일의 대표기업인 지멘스의 성장 배경이, 뛰어난 기술력이 아니라 부정한 뇌물이었다니,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멘스의 대외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다른 기업들과의 제휴도 잇달아 연기됐다. 4억 6천만 유로(약 6천 9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 100억 유로(약 14조 8천 8백억 원)에 달하는 벌금 판결, 공공 계약의 해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였다.



위기에서 시작되는 ‘준법정신’

일촉즉발의 지멘스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건 지멘스 역사상 첫 외국인이자 외부인인 페터 뢰셔 회장이었다. 위기의 근원이 부패에 있었던 만큼 개혁에 대한 뢰셔 회장의 의지는 강력했다.

“‘클린 비즈니스’. 부패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 (Zero tolerance · 무관용)’”

뢰셔 회장은 준법 프로세스를 기초부터 재점검하고 전담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다. 제 아무리 유능한 임직원이라도 준법 프로세스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하였다. 지멘스 코리아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과 준법감시인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있다.



부패 척결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는 직원들의 로열티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직원들이 “회사가 나를 불법으로 내몰지 않는다”, “나를 책임지고 보호한다”라며 경영진의 조치에 환영한 것이다. 준법경영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무너지는 듯했던 지멘스의 수익도 회복세에 들어섰다.

최악의 부패 기업에서 최고의 반부패 기업으로의 변신

2017년 지멘스는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 최악의 부패 기업으로 추락한 2006년 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체질개선에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변화에는 지멘스 코리아의 노력도 있었다. 201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한국 지멘스를 반부패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날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멘스의 창업자 폰 지멘스의 말을 언급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미래를 팔지 않겠다”

지멘스는 2009년부터 세계은행과 협력해 15년 간 총 1억 달러(약 1130억 원)의 지원금을 청렴 비즈니스와 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세계 비영리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추락한 이미지의 회복과 동시에 부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보다 준법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지멘스의 의지를 모두가 믿어준 것은 아니었다. 돈 되는 일은 다 했고, 뇌물도 서슴없이 준 과거의 행적이 불과 몇 년 만에 청산되었느냐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다. 더불어 준법경영과 이익추구는 상충하는 가치라는 인식은 지멘스의 재기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선을 갖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부패로 입었던 손실이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치명적인 사항이었기에 지멘스는 준법경영에 대해 철두철미한 체질 개선에 임했다. 준법경영에 대한 보상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어떤 언어로든 신고 가능한 내부고발 핫라인 ‘텔 어스(Tell us)’라는 제도를 만들어 직원들과 외부인들이 익명으로 내부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 법률회사 소속의 변호사를 독립적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지멘스는 준법경영을 통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며 보란 듯이 변신에 성공했다. 준법경영 시스템이 정착된 이후인 2009년, 사상 최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2010년에는

순이익이 배로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어 준법경영이 기업 성장의 바탕임을 입증했다.

지멘스의 부패 척결 사례는 현재 재벌 총수들이 연이어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뇌물은 필연적으로 대가

가 따라오기에 그 당장의 이득 안에는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설사 적발되지 않더라도 부패가 관행인 조직의 직원들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리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리더들이라면 물이 아래로 흐르듯 준법 정신 역시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뢰셔 회장의 말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역사속의 사례

[시대를 관통하는 인재상, ‘청백리’]

권한을 가진 공직자와 그 권한이 필요한 민원인, 양측의 탐욕이 만나 생기는 부패. 고대 이집트에도 뇌물이 공정한 재판을 망친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 이쯤 되면 뇌물은 인류의 역사와 동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대를 막론하고 개혁 의지를 가진 군주라면 누구나 ‘청백리’, 뇌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인물에 목말라했다. 어느 시대, 어느 조직에서든 뇌물은 조직의 발전 동력을 꺾어버리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뇌물을 준 자의 임명을 취소하다

청탁은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는 현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범죄다. 하물며 정과 의리 같은 가치들이 지금보다 우선했던 조선시대에서 매관매직은 흔한 일이었다. 그래서 뇌물을 거절한 관리, 구치관의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조선시대 세조 때 정승 자리에 오른 구치관(1406~1470)은 일체의 청탁을 배격해 청백리의 표상이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여러 기록 중 인사권을 가진 이조판서 시절의 일이 특히 눈길을 끈다. 어느 날 지인이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 뇌물을 들고 찾아오자 구치관은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보여줬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임명초안인데, 귀공의 이름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신의 영달을 구하는 귀공의 모습을 보니 나라를 위한 인물은 아닌 것 같소.”라며, 구치관은 명단에서 그 지인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관료 중 유일하게 뇌물을 거절하다

구치관이 좌의정을 지낼 무렵, 조선의 관료사회에 대대적인 뇌물 스캔들이 터졌다. 구치관을 제외한 6부 판서와 정승들 모두가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된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모든 장, 차관들이 뇌물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준 대형 사건이다. 심지어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인지는 조선의 4대 부호에 들어갈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축재를 일삼았다. 최고위 관료들이 전부 휘말린 뇌물 사건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인물은 구치관뿐이었다.

이처럼 뇌물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공직사회를 위협해왔다.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직을 맡은 개인들의 엄중한 마음가짐이 먼저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감시제도가 취약했던 왕조시대라 할지라도 청백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있어도 결국 이를 지키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엄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더 많은 구치관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어느 자리에 있던지 뇌물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홀로 불법에 참여하지 않은 구치관의 일화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관시(關係·관계)의 국가인 중국이 최근 전례 없는 부패 척결활동에 나섰다. 한달 동안 국장급을 포함한 공직자 5,600여명을 처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처벌수위는 민간부분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뉴욕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상장으로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알리바바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부패를 대면하는 중국의 대대적인 변화는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변화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국내 반부패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 클럽*에서 발간한 글로벌 반부패 동향 및 사례에 대한 연구 중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아시아·중국편』을 중심으로 중국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과 그 경영진이 고려해야 하는 중국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부패 리스크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17 아시아-태평양 부패인식조사(People and Corruption: Asia-Pacific Global Corruption Barometer) 결과, 최근 부패가 늘어났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이렇게 응답한 숫자는 응답자의 3/4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또한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뇌물을 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응답자의 26%에 달했다(한국 : 3%, 일본 : 0.2%). 중국의 공산당 주도의 정치체제는 권력의 견제 및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키며, 고위공무원의 부패가 만연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패는 경제 불안정과 함께 소득불균형, 환경문제 등 중국사회 전반에서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과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과 경영자에게 이러한 중국의 부정부패는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반부패 글로벌 동향에 맞춰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민원 처리 및 사법부 대응 시에 뇌물, 정치적 개입, 급행비를 경험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에 만연해 있는 관시(關係)를 위한 선물은 글로벌 반부패 규제화 동향이 거세지고 있는 현재 국내·국제 법규에서 뇌물이 될 소지가 높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역시 부패 리스크로 인식될 수 있는 선물의 종류와 금액, 시기, 사업상의 이해관계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중국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는 79위로, 2012년의 80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하위권에 머무르며 개선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반부패작업을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2기 집권에는 반부패 강도가 기존보다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사업분야를 아우르는 민간부문에 대해 뇌물

단속이 이루어지며 전례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련 반부패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하, 중국 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부당경쟁법(이하, 중국 경쟁법)’이 있다.

Ⅰ 중국 반부패 법과 제도(2007 ~ 현재) Ⅰ

실시연월	법률 법규, 제도	주요 내용
2007.1	돈세탁방지법	금융기구의 고객신원확인, 신고의무 등
2007.9	국가예방부패국 설치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조사기구
2010.10	행정감찰법(수정)	공무원, 행정기관, 행정부 파견인원·조직에 대한 감찰
2010.12	공산당 청렴 건설책임제 실시규정	당원 및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책임자 처리 강화
2010.12	반부패청렴건설백서	중국 최초, 국무원이 공포
2012.12	청렴을 위한 ‘8항 규정’	허례허식, 형식주의 금지를 명문화
2013.9	공직자 비리정보 사이트 개설	중앙기율위, 검찰부 개설
2014.1	2013 반부패보고서	중국 최초, 중앙기율위가 공포
2015.1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9차 개정	부패적용 대상 및 벌금확대
2016.4	사법해석 추가	뇌물의 범위에 무형의 혜택 포함
2018.1	반부정부당경쟁법 개정안 시행	
2018.3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국 형법은 1980년 1월 발효되었으며 1997년에는 개정을 통해 뇌물과 부패범죄에 관한 조항이 강조되었고,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뇌물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9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페어플레이어 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아시아 · 중국편

중국 형법은 뇌물 공여와 수수를 모두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먼저 뇌물 공여는 ‘부적절한 이득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품에는 금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소유권한(예, 주식)까지 포함한다. 또한 뇌물의 공여가 이루어졌으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아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법률에 따라 미수죄가 구성되기도 한다. 뇌물수수의 경우, ‘공여자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경우’에 실질적인 수수 없이 요청을 수락한 경우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 또한 가중 처벌 요인과 감경 요인이 있다. 먼저 3인 이상에게 공여하였거나, 수사에 비협조 하는 경우, 동일전과가 있는 경우는 처벌이 가중되며, 기소 전 자백하거나 공여자가 사건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형이 가능하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중국 경쟁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수정안이 심의를 통과하며 201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중국의 상업 뇌물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과정을 개선하였으며, 처벌 완화 방안을 포함하는 등 반부패 체계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경영자의 공개신용기록에 처벌사항을 기록하여 평판과 신용등급을 훼손하는 등 그 처벌수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경우 그 처벌이 경감될 수 있고, 부패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여겨지는 할인이나 중개수수료 활동도 장부기재 등 처리과정이 투명하다면 반거나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범법 행위를 관리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전략, 영업업무를 파악·분

석하여 경쟁법에 대응 및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기적인 실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부패관리 강화와 국내 기업의 대응

최근 중국 정부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자체적인 반부패법을 공격적,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및 외국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반부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경쟁법’의 개정안을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함으로써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상업뇌물의 범위를 넓혀 규제의 강도를 상당부분 강화했다. 기업은 부패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와 조사 절차, 잠재적인 재정 및 평판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조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직원들이 중국의 반부패 조치 또는 다른 국가의 반부패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다.

과거에 뇌물의 수수와 공여는 기업생존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뇌물은 해결해야 하는 위험이고, 이러한 위험 회피는 도덕성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투명성기구(TI-UK) 기업이슈 총괄인 ‘피터 반 빈(Peter Van Veen)’은 부패야말로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하고 있다. 판시(關係)의 나라 중국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들은 주목해야 한다.



* 페어플레이어 클럽(Fair Player Club, FPC)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기업들의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구축하기 위한 전세계 24개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GCNK)가 주최하고 세계은행과 지멘스 등이 후원하고 있다. 올해 3월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FPC는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반부패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추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을 구축하는 장이 되었다.

▶ 국내동향

해외동향 ◀

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3월6일 발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3월 6일 발족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부패 문제가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반부패·청렴정책의 수립과 점검에 대해 정부주도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지난 1월 정부에서 제정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출범하였다. 본 협의회의 구성은 경제계, 직능부문, 공익부문, 시민사회, 언론·학계, 공공부문의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계, 시민사회 등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정부주도의 그 어떤 반부패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반부패 공동노력의 일환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대해 "전방위적인 반부패 노력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 정책브리핑, 03.06.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8449>

② 충청남도 부여군, 반부패 예방 '익명제보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도입

충청남도 부여군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의 목적으로 '익명제보 신고시스템(이하 헬프라인)'을 도입했다. 그 동안의 공직자 부패 행위 신고절차는 모두 실명인증이 필요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및 부정부패의 사전통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도입된 헬프라인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고 접속기록이 남지 않는 등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대상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부당이익 수수, 기타 건의 및 미담사례 등이며 신고접수 후 신고내용만 부여군청 감사팀으로 전달되어 사실여부 조사, 조치 후 처리내용이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본 시스템이 부정부패 사전예방과 더불어 자정작용을 통해 조직문화 청렴도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자와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참고 - 충청뉴스, 03.06.

<http://ccnewsq.com/2018/03/N1520300657676>

③ 서울시,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 공유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환경, 교통, 문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공유가치 확산을 위해 공유촉진 사업비지원 사업을 공모하였다. 공유가치 확산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96개 사업에 대해 공유사업비 및 홍보비 등 총 12억 700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유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과 기타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두 가지의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며 선정된 공유기업은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 발급 및 홍보지원 등 행정적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공유기업은 사회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이득이 된다"고 말하며 공유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유인과 제도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데일리환경, 03.12. <http://www.daily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10>

① 일본, 고베제강 품질조작으로 도요타 미국서 집단소송 위험

고베제강의 품질조작의 후폭풍이 해당 제품을 사용한 기업들에게 거세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를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거주민 2인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고베제강과 도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베제강의 제품을 생산에 활용한 기업은 605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공기 및 열차 등의 생산분야에 사용되어 안전과 관련된 높은 기준 위반 등으로 향후 파장이 점진적으로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베제강은 이와 관련하여 2017년 회계이익 450억 엔 중 데이터 조작에 따른 손실은 100억 엔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밝히며, 해당 사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징계안, 데이터 조작 관련 보고서 등으로 파장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참고 - 매일경제, 03.07.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300015&year=2018&no=151572>

② 미국, '우버 헬스'로 우버 부활조짐 보여

우버 서비스에 대한 세계 각 국가들의 규제와 사내 성추행 등 다양한 스캔들로 기업가치 급락의 위기를 맞았던 우버가 다양한 서비스의 전환으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자전거 서비스인 '우버 바이크', 저렴한 합승 서비스인 '우버 익스프레스 풀'과 더불어 환자를 병원까지 수송하는 '우버 헬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미국의 진료 예약환경은 안정적인 교통수단의 부재로 노쇼(no-show)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이용자가 호출하는 방식과 달리 우버와 제휴 병원이 협력하여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약속을 잡을 경우 병원측에서 직접 우버 탑승 예약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그 동안 우버의 공격적인 사업확장의 전략이 핵심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수정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 - 매일경제, 03.02.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300015&year=2018&no=141192>

③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틀 마련으로 중국 내 반부패 활동 강화 전망

중국의 국가 주석직 임기제한 헌법 규정 폐기로 인해 시진핑 정권의 장기집권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11일 열린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2연임 이상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을 99.8% 찬성률로 삭제하여 일각에서는 '시진핑 쇼', '황제 대관식' 등으로 본 회의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헌법 개헌은 14년만으로, 여우사냥, 호랑이사냥, 파리잡기 등 중국 내 기존 반부패 흐름에 맞춰 그 내용은 반부패 및 양극화해소에 방점을 두었으며, 기존 감찰조직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보다 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감찰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부패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참고 - 파이낸셜뉴스, 03.11. <http://www.fnnews.com/news/201803111658430898>



CARDNEWS 1

부정청탁과 만나라
칭찬하는 이웃나라

CARDNEWS 2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의 경제 호랑이'라 불렸어



CARDNEWS 3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후엔
반부패 호랑이로 바뀌었지



CARDNEWS 4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칭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한국의 청탁금지법 시행은
중요한 제도적 발전

독일 베를린 재단 SGI(지속가능거버넌스지수) 결과 발표 ('17.9.)

CARDNEWS 5

한국을 반부패 호랑이로 얘기한
국제 반부패 관련법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지



청탁금지법을 공격적으로 시행한
한국은 국제사회 반부패 운동의 리더

해외부패방지법(FCPA) 전문매체 The FCPA Blog
미국 연드루 스톨딩 교수 기고('18.2.16.)

CARDNEWS 6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칭찬했어



한국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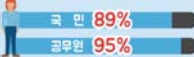
홍콩 정치경제위원회(PECC) 아시아부패지수 결과 논평('17.3.29.)

CARDNEWS 7

일본 닛케이 신문은 한국의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이라고 했어



청탁금지법 지지율



CARDNEWS 8

청탁금지법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작품이 아닐까?



CARDNEWS 9

이제는 우리 모두가
더 지키고 키워나가는 거야



지식 1g



넛지 효과 Nudge Effect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힘, 넛지! ‘넛지(NUDGE)’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 강압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해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 ① 소변기 중앙에 붙여놓은 파리 모양 스티커로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 양 80%가 줄어듦
- ② 대기오염을 줄인 만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③ ‘이미 주민의 90% 이상이 납세의무를 이행했다’는 납세 유도 안내문

기업의 리더들은 조직원들의 더 좋은 선택을 이끌어내는 ‘선택의 설계자’들입니다.

청렴한 문화를 위해 우리 기업에도 불쾌한 강요나 지루한 캠페인보다
유쾌한 ‘넛지’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요?



교육과정 알리미

기업윤리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5월말에 운영될 예정이니 윤리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5월말, 서울 소재 교육장(예정)
- 참여대상 :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 또는 윤리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의 직원
- 신청방법 : 이메일(nansay@korea.kr)로 신청
- 신청양식

업종*	기업명	부서명	성명	직위(직급)	연락처(사무실/핸드폰)	이메일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유통·서비스업, 기타

※ 문의사항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 담당관실 044-200-7166

사례응모

이 기업을 추천합니다

-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독자의견을 수렴하여 윤리경영의 우수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 하단의 담당관실 메일주소를 통해 추천하고 싶은 우수 기업과 관련 내용을 보내주세요



독자퀴즈

Q. 다음 중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 ① ISO 37001
- ② ISO 26000
- ③ Bribery Act 2010
- ④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 담당관실(jykim5@ips.or.kr)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4번 / 지난 호 정답자는 김경한님, 김혜윤님, 이호영님, 정무식님, 김병수님 입니다. 축하드립니다.